

김영록 “무안공항 연계 광주 군공항 이전” 후폭풍

“무안도 속고할 필요가 있다” 언급 전남 첫 공식입장... 파장 일파만파 무안 염두에 둔 말 아니냐 해석 속 유치의사 지자체 황당 무안 '반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했던 무안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군공항 유치 움직임을 보여온 함평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며, 광주시는 “전남도의 중재적 역할”을 주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 이전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며, 무안도 속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전남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전남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결을 위해선 무안군도 속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선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지사의 무안 이전 발언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첫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대하는 전남도의 태도는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7일 박원종 전남도의회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은 정부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의 시책이지만 전남도에 이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예비대상지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 이전하기로 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였지만 무안군의 강한 반발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전남도의 입장은 선 인센티브, 후 의견수렴으로 귀결됐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향후 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기조다.

이번 김 지사의 발언으로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영광군민과의 대화에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느 지역으로 가던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 의견을 들어 풀어갈 것이며 광주시와도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장시간 표류해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내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4월 본회의 통과도 기대된다.

다만,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광주 군공항 이전지로 무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무안은 즉각 반발하고 있고, 함평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김영록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무안군으로 이미 정해놓고 190만 전남도민을 우롱하고 능멸했다”며 “도지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광주편에서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김 지사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 3면에 계속 최행지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5개구청장 등이 28일 광주시청 잔디밭 광장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독도→다케시마’ 日 초등 교과서까지 왜곡 확대

강제 징용·징병 ‘지원’ 등 거짓 서술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다케시마(죽도·竹島)’ 등 역사 왜곡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에서 교육부 기능을 수행하는 문부과학성은 28일 초등학생이 2024년 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 강화된 모습이다.

교육부가 교과서 9종을 전수 분석한 결과, 9종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 또는 서술돼 있었다.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5종)이 담겼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된 교과서(8종)가 대부분이었다.

일본문교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는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편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은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고 쓰여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강제 징용·징병 등을 기존보다 약하게 서술한 교과서도 2종 발견됐다.

도교서적은 2019년 ‘강제로 끌려와서’라고 서술된 내용을 올해 ‘강제적으로 동원돼’라고 바꿨으며, ‘징병당하고’란 표현은 ‘참여하게 됐다’고 교체했다. 심지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앞에는 ‘지원해서’라는 거짓 수식어를 붙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산케이이는 이는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정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제도(일본명 북방영토)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중군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교과서 왜곡이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서울=김선욱 기자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직장과 가정, 어디서든 발생하는 심장마비 사고!
**AED(자동심장충격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ED 역할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장비

- 품 목 명 : 저출력심장충격기
- 사용목적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흡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 및 렌탈 : (주)나눔테크 1577-8515 www.nanoomtech.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2022-GN1-28-0016 (유효기간 25.07.28)